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3-16호 | 2023년 5월 15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교육정책 평가

- 검찰 낙하산 인사, 국정에 무지한 대통령, 장관도 정책도 이명박 정부 재탕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 박사)

### 《요약》

#### ■ 장관 공백 6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 장관 임명, 검찰 낙하산은 교육부에도

-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장관은 ‘만 5세 입학’ 사건으로 취임 35일 만에 조기 사퇴
-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조각을 완성했으나, 이명박 정부 재탕 인사로尹정부의 협소한 인재풀 증명
- 이주호 장관은 교육개혁을 위한다며 현직 검사를 장관 보좌관으로 임명하여 교육계의 반발을 삼

#### ■ 우왕좌왕, 오락가락... 경쟁과 갈등만 부추기는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의 민낯

- 사회적 합의 없는 지르기식 정책 발표, 반도체에 올인하며 자기 공약도 정면으로 부정
- 공교육도 경쟁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 전면화, 교묘한 말 바꾸기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 증가

#### ■ 급조된 정책, 부실한 국정운영, 철학은커녕 일관성도 없는 교육정책

- 준비 부족 상태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 베끼기 공약이 출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은 사라짐
- 교육 공약-국정과제-교육부 추진과제와의 정책 적합성과 연계성이 턱없이 낮아 빌 공(空)자 공약의 전형

#### ■ 장관도 MB정부 사람, 정책도 MB정부 정책

- 이명박 정부 내내 교육정책을 쥐고 흔들었던 이주호 장관의 재등판으로尹정부 교육개혁 정책은 MB정부 교육정책의 연장선에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했던 교육계의 극심한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

#### ■ 국정 리스크 1호尹 대통령, 국민의 공분을 사는 교육 망언 남발

- 尹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망언을 시전. 대통령이 되어서도 무개념 발언들을 쏟아냄
-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도, 국가 난제에 대한 위기의식도 느껴지지 않음
- 더 큰 문제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시작된 ‘주 69시간제’ 정책처럼尹 대통령의 무개념 망언을 실현할 정책을 부처가 계획하고 발표한다는 것임

#### ▶ 키워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교육정책 평가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 장관 공백 6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 장관 임명<sup>1)</sup>, 검찰 낙하산은 교육부에도

-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속에 취임 35일 만에 조기 사퇴함
  - 역대 최단명 사회부총리인 박순애 장관은 논문 표절, 자녀 입시 컨설팅, 음주운전, 조교 갑질 등 수많은 의혹에도 동문서답식 해명으로 일관
  - 尹 대통령은 오히려 “前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면서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임명 강행
  - 이후 박 장관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을 연구도, 여론 수렴도, 이해관계자 협의도, 그 어떠한 절차도 없이 발표함
  - 尹 대통령이 한 술 더해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학부모 · 교육단체 · 교사 등의 거센 반발과 언론의 비판 보도가 쏟아짐. 이에 박순애 장관은 사실상 경질됨
- 앞서 尹정부 1기 내각 첫 낙마자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온갖 의혹에도 버티다가 ‘방석집’ 논란으로 자진 사퇴함
  -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딸, 아들까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장학금에 대한 사유화 논란이 제기됨
  - 논문 짜깁기 논란도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제자였던 이성만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방석집’에서 최종 심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하루 만에 자진해서 사퇴함
-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주호 장관 임명으로 겨우겨우 1기 조각을 완성했으나, 이명박 정부 재탕 인사,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평가로 尹정부의 협소한 인재 풀을 여지없이 드러냄
  -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내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에서 장관까지 교육계 요직을 거치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총감독 역할을 자임했던 낯은 인물임
  - 李 장관도 에듀테크 관련 기업들의 고액 후원금, 정치자금 사적 사용, 장관 재직시절 딸의 이중국적 취득, 교육 비전공 딸과의 연구보고서 공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됨

1)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2022.10.27.). 무한경쟁 교육, 시장만능주의자 이주호가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 이주호 장관은 취임 후, 교육개혁을 위한다며 현직 검사를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임명하여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삼

- 이주호 장관이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범죄 수사가 전문인 현직 검사 우재훈 씨를 법무 보좌관으로 임명<sup>2)</sup>하자 교육계의 큰 반발을 삼. 현직 검사가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임명되는 것은 이례적 인사이며, 이주호 장관이 2011년 장관을 역임하던 시기에 당시 검사였던 現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임명한 사례가 유일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파견 검사) 법무 보좌관을 임명했던 2011년쯤 교사에 대한 대규모 기소와 대량 징계 방침, 징계를 거부하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시행명령과 직무이행명령 등이 있었다"면서 "교육부의 법무보좌관 임명은 현장과의 소통보다 법치를 들먹이며 특정 의도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표명
- 더구나 교육부 직제와 관련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관 밑에는 2인의 장관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어 있으며, 법무 보좌관이라는 직제는 없음<sup>3)</sup>. 이주호 장관은 이미 2인의 정책보좌관을 임명함<sup>4)</sup>

## 2. 우왕좌왕, 오락가락... 경쟁과 갈등만 부추기는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의 민낯

○ 사회적 합의 없는 지르기식 정책 발표, ‘만 5세 입학’ 논란에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만 5세 입학’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국민의 큰 반발에 부딪혀 임명 35일 만에 장관 사퇴로 국정 혼란을 수습함
- 또한 대선 공약에서는 다양한 고교 선택과 수월성 교육을 강조했으나<sup>5)</sup>, 박순애 장관이 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고만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외고만 폐지한다는 근거가 뭐냐’며 국민의 반발을 삼.
- 이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법적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尹정부는 작년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 존치를 담은 ‘고교체제 개편안’을 올해 상반기 발표로 미룬 뒤 아직도 소식이 없어, 학교 현장은 혼란의 연속임

2) 오마이뉴스(2023.02.09.). 검사를 왜... 교육부장관 보좌관 임명 두고 시끌.

3)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직제 규정 위반 등의 지적이 있자, 법무 자문 담당으로 직제를 변경하였으나, 교육부에는 이미 13인의 고문변호사가 교육부 관련 소송, 법령 해석, 법령 재개정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재훈 검사의 업무와 겹침

4)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22년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권통일 씨와 장관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이주호 장관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의 사무총장 출신인 황보은 씨를 임명한 바 있음

5)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튜브 ‘공부왕 찐천재’에 나와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로 나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누리꾼들에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교육부는 경제부처”,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반도체에 올인 (All-in)<sup>6)</sup>하며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본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무개념 대통령
  - 尹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국가의 교육시스템이 오로지 ‘반도체’만 바라보게 만들면서, 6~70년대 박정희 시대에나 통하던 교육의 경제 만능주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냄
  - 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대학 정원 규제를 개정해야 하는 수도권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 확대에 난색을 보이자, 尹 대통령은 면전에서 강한 질책을 함. 이에 교육부는 부랴부랴 하루 만에 서울과 수도권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 확대 검토에 착수함
  - 국가 중대사인 인재 양성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마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 부서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대학 교육을 단순히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략시키는 꼴
  -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이로 인한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부동산 가격 상승, 저출산,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명백하게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 기조임
  -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수도권 규제(과밀부담금 부과, 공장 총량 규제, 환경 규제 등)까지 개정 요구가 빗발칠 것임

#### ○ 공교육도 경쟁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 전면화

- 尹 대통령은 지난 1월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교육을 서비스이자, 용역으로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교육을)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함
-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공교육 시스템을 갖춘 대부분의 나라가 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모든 시민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통 의무교육을 제공하는지, 국가의 공적 사회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가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개념조차 없는 무지한 발언임

#### ☑ 윤석열 대통령 발언 (2023.01.05. ‘2023년 교육부 업무보고’)

(요약)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이자 용역으로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상 보장이 돼야만 한다.

-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 보자. 국가가 관장을 한다고 해서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가격이 형성돼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더 큰 피해는 독점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 (교육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 (획일적인 교육은) 마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체력을 얻기 위해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메뉴 한 달 치를 딱 정해서 이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6) 시사인(22.06.27.).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올인’, 비수도권이 위험하다.

○ 오락가락 교묘한 말 바꾸기 정책으로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은 커짐

- 22년 2월,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거점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함
- 22년 4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방만한 교육예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난에 빠진 지방대학 쪽으로 돌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발표
- 뒤이어 22년 5월, 인수위 국정과제에는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가칭) 지역고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
- 공약에서 발표한 거점국립대 육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대학 교육 행·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으로 변질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아우 돈 뺏아서 형에게 준다’는 비판, 대학 행·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은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유·초·중·고등학교 관련 교원단체·시도 교육청과 대학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었고, 대학 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

3. 급조된 정책, 부실한 국정운영, 철학은커녕 일관성도 없는 교육정책

○ 공약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사라진 교육정책<sup>7)</sup>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고, 서민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공약함. 또한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尹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포함되지 않음
- 공약에 없었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 설치, 사립대 규제 완화 등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10대 핵심 추진정책의 세부 과제로 포함됨

○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 빈약한 공약, 베끼기 공약이 출몰함

-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육 공약 중 같거나 유사한 공약 과제는 13개 (전체 교육 공약 중 27.1%)에 이룸<sup>8)</sup>
  -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민간 어린이집·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지역 소재 대학 지원, 대학 평가제도 개선, 대입제도 개선, 평생교육·직업교육 지원 확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임
-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로 당선 후 정책 방향을 잡다 보니, 유사 중복 공약의 지향점이 상이한 특징이 나타남
  - 지방 대학 발전방안, 대학평가제도 개선, 고등교육재정확보 등은 동일한 공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완전히 다름

7) 서동용 의원실(2023.02.03.).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8) 민주연구원(2023.04.20.). 윤석열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자료집.

## <20대 대선, 양당의 동일·유사 교육공약 비교>

구분	더불어민주당(12개 분야 48개 공약 과제)	국민의힘(15개 분야 47개 공약 과제)
유아·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li> <li>- <u>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동등 처우 노력</u></li> <li>-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 통합 실시</u></li> <li>- <u>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u></li> <li>-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li> </ul>
고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지자체-대학 동반성장형 ‘지역대학혁신 체제’ 확대</li> <li>- 대학평가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중-고-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li> <li>-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li> <li>-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li> </ul>
대입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li> <li>- 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li> <li>- <u>국가교육위원회 주도 2028학년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로 부모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li> <li>-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li> <li>- <u>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u></li> </ul>
평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계좌제 도입</li> <li>-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직무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제 도입</li> <li>- 평생교육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 제공</li> </ul>
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연계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로 취업 역량 제고</li> </ul>
디지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미래인재’ 양성</u></li> <li>-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 AI, 빅데이터 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u></li> <li>- 교육단계별 AI 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li> </ul>

\* 볼드체는 내용상 동일 공약

\* 출처 : 민주연구원(2023.04.20.). 윤석열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자료집을 참고하여 재작성.

### ○ 급조된 정책 설계로 교육 공약-국정과제-교육부 추진과제(업무보고)와의 정책 정합성과 연계성이 턱없이 낮아 빌 공(空)자 공약의 전형을 드러냄

- 20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교육 공약 47개 과제 중 7개 과제만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정책수용률 14.9%로 사실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공약(公約)이 아니라 빈 空約임을 선언함
  - 참고로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정책수용률이 78%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 국민의힘 대선 교육 공약 47개 중 8개 과제만이 교육부 추진과제로 채택, 현재까지의 공약-교육부 추진과제 간의 정책 수용률은 고작 17%에 이름<sup>9)</sup>
-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31개 중에서도 교육부는 7개 과제만을 채택, 정책수용률 22.6%를 보이며 공약-국정과제-추진과제가 판이해짐
- 심지어 초등학교 전일제학교 추진,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지역대학 라이즈(RISE) 체계 추진, 글로컬(Glocal) 대학 추진 같은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22년 7월 대통령보고와 23년 1월 대통령보고 사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지거나 새로 나타나거나 변경되는 행태를 보임

9) 민주연구원(2023.04.20.). 윤석열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자료집.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과 비교한 국정과제-교육부 추진과제와의 연계성>

대선 공약(22.4월)		국정과제 (22.5월)	22년 교육부 업무보고 (22.7월)	23년 교육부 업무보고 (23.1월)
유아·돌봄	단계적 유보통합	○	○	○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	×	○
초·중·등 교육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	×	△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	○	○	×
대학교육	중-고-대학 연계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	○	△
	대학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	○	○
	부실·한계대학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	○	○

\* 주) ○ : 연계성 있음, × : 연계성 없음, △ : 공약 변경

\* 출처 : 포럼 사의재(2023.04.25.)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자료집을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재작성.

#### 4. 장관도 MB정부 사람, 정책도 MB정부 정책

○ 이명박 정부 내내 교육정책을 쥐고 흔들었던 올드보이 이주호 장관의 재등판으로尹정부 교육 개혁 정책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연장선에 있음

- 이주호 장관 취임 이후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정책이 다수임.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유사한 정치이념을 가졌으며, 두 정부에서 이주호 장관이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임<sup>10)</sup>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비교>

구분	윤석열 정부	이명박 정부
정책 비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교육 엔진 살리기
정책	개별 맞춤형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학교 자율성 확대	학교 자율경영체제 구축
	교육자유특구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협약형 공립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 선진화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 함양	미래사회 핵심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모든 학생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 출처 : 박남기(2023).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정책 긴급 진단,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을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재작성.

10) 박남기(2023.04.13.).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정책 긴급 진단,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그대로 베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MB 정부에서 발생했던 교육계의 극심한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예상임

-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극심한 교육계 갈등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미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시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갈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교육부가 중점 교육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교육자유특구’도 지역마다 분쟁과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학교 서열화, 귀족학교 양산 등 사회적 갈등 요소로 대두될 가능성도 충분함
-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갈등만 키우고 사실상 무산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도 마찬가지임. 나아가 교대와 사범대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Glocal) 대학’ 정책과 맞물려 예측하기 힘든 갈등의 씨앗을 불러올 것임
-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추진하려는 ‘유보통합’ 정책도 진퇴양난임. 졸속 추진,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을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임

## 5. 국정 리스크 1호 尹대통령, 국민의 공분을 사는 교육 망언 남발

○ 尹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망언들을 시전함

- 21년 12월, 대학생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지금 대학) 1·2학년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다”고 발언
  - 구인·구직 플랫폼은 1998년부터 이미 서비스를 시작<sup>11)</sup>했고, 관련 앱은 구인·구직자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임
  - 당시 누리꾼들은 “구직 앱이 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교차로 보고, 신문 광고의 구직란을 보는 줄 아는 모양”, “국힘당에서 하는 변명이라는 게 윤석열은 AI 매칭 서비스를 의미했다. AI 매칭이면, 처음부터 AI 매칭이라고 했어야지 국민들이 관심법이라도 익히란 말이나?” 등의 반응을 보임
- 22년 2월,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라고 발언
  -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설치된 과학고를 비롯해 예술고, 특성화고, 자사고, 자공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대통령 후보가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쏟아냄

11) 연합뉴스(2008.06.01.). 열 돌 맞은 온라인 채용시장.



○ 尹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무개념 발언들을 쏟아냄.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국가 난제에 대한 위기의식도 느껴지지 않음

- 22년 7월, 박순애 장관 임명 당시 음주운전, 논문표절, 조교 갑질 등 많은 의혹과 높은 여론의 반대<sup>12)</sup>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치켜세우며 임명을 강행하더니, 임명 후에는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고난을 이겨낸 영웅으로 취급함<sup>13)</sup>
  - 또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라더니, 박순애 장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도 시기나 상황,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며 자기 발언도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발언을 함
- 22년 9월, 어린이집 현장 간담회를 찾은 尹 대통령이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된 아기들도 어린이집에 오는구나”라고 발언하자 옆에 있던 보육 교사가 6개월부터 온다고 설명하였으나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개네들은 뭐해요?”라고 무심한 듯 재차 발언함
  - 尹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기사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왜 6개월 차부터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한 번 생각조차 안 해봤다는 것”, “아기들에 관해선 솔직히 자식이 없으니 모를 수 있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저 자리에 방문한 것이라면 적어도 몇 살 아이들이 있는지, 어떤 운영방식인지, 왜 가는지는 알고 가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모른다니 실소가 나온다” 등의 비판 글이 쇄도함

○ 더 큰 문제는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주 69시간제’ 정책처럼 尹 대통령의 무개념 망언을 실현할 정책을 부처가 계획하고 발표한다는 것임

- 교육부는 인재 양성 정책에서 채용공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력 수요를 경력·학력에 따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활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음
- 국정에 대한 몰이해로 돌출되는 대통령의 실언을 해당 부서가 뒷수습하지만, 결국은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모습임

12) KSOI 여론조사(22.06.11.).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적합 63.9%, 적합 14.9%**

13) 민주연구원(2023.05.09.).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핸드북,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14) 교육부(2023.1월).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설명자료.